
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종합대책

- “새출발 희망 프로젝트” -

2024. 7. 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여건	1
II.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	4
III.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	5
1. 경영부담 완화	6
2. 성장촉진 지원	14
3. 재기 지원	17
IV. 운영체계	20
V. 향후 추진일정	21

I. 소상공인·자영업자* 경영여건

*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개인사업자 간 개념에 차이(별첨)가 있으나, 통상 유사하게 활용

□ [현황]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고, 생계형 업종 중심

○ 자영업자 수(약 570만명)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* 지속

*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(% , '22년): (韓)23.5 (佛)13.1 (日)9.6 (獨)8.7 (美)6.6

▪ '23년 하반기 이후 '고용원 없는 자영업자' 중심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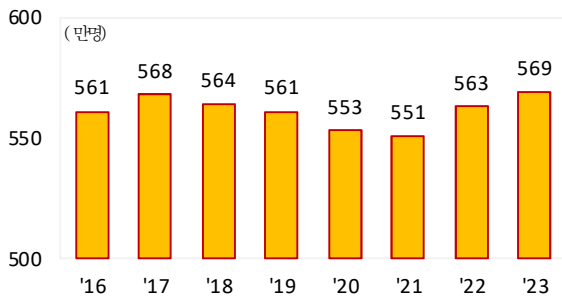
* 전체 자영업자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23.7)9.2 (9)1.8 (11)0.3 ('24.1)2.9 (3)△3.6 (5)△11.0

↳ 고용원 無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23.7)4.4 (9)△2.0 (11)△7.8 ('24.1)△0.1 (3)△3.5 (5)△11.4

○ 도·소매, 음식·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* 생계형 업종 중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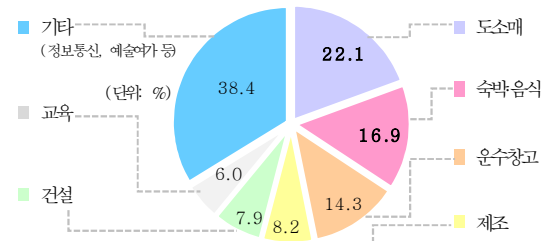
* 창업 준비기간('22년, 개월): 숙박·음식 8.4, 도·소매 9.0, 교육서비스 11.5, 제조 10.6

자영업자 수 변화



* 출처 : 경제활동인구조사 (통계청)

업종별 자영업자 분포 ('23년, 농업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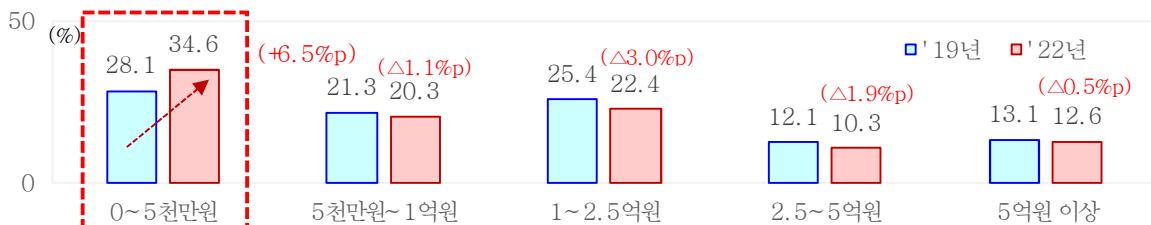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경제활동인구조사 (통계청)

□ [경영] 생계형 업종, 20~30대 중심 소상공인 여건 악화

○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증가('19~'22년 +6.5%p), 中(△4.1%p)·上位(△2.4%p)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

세부 매출액 구간별 소상공인 비중 ('19년 대비 '22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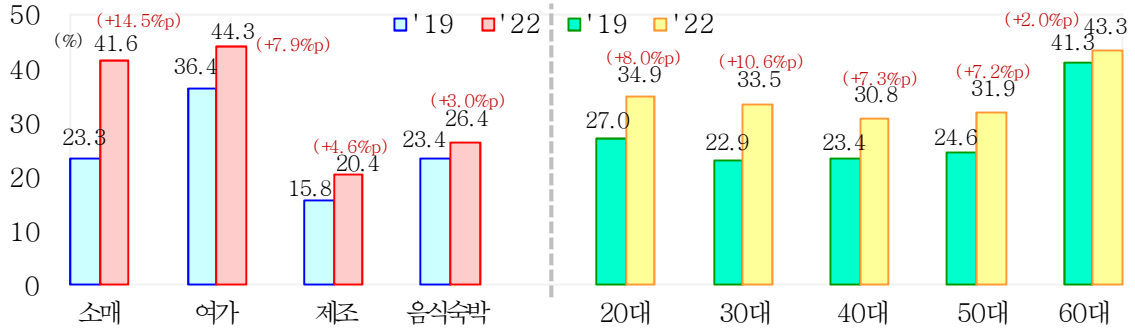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소상공인 실태조사 (중기부, 통계청), '22년 통계까지 활용 가능

※ '23년의 경우, ①코로나19 정책지원 축소, ②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

- **업종별로는 소매, 여가 등 생계형 업종, 연령별로는 청년층*** (20~30대)에서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 증가

*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(20~30대) 비중(%): ('19년) 약 15.3 → ('22년) 약 21.7

업종별·연령대별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비중 증감 ('19년 대비 '22년)



* 출처 : 소상공인 실태조사 (중기부, 통계청)

□ (부채)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출 증가, 최근 연체율 상승

- **코로나19 대응 과정('20~'22년)에서 대출잔액·차주 수가 크게 증가***

* 대출잔액(조원) : ('19)686.1 ('20)803.5 ('21)909.2 ('22)1,019.8 ('24.1Q)1,055.9
 대출차주(만명) : ('19)191.4 ('20)238.4 ('21)262.1 ('22)307.0 ('24.1Q)312.6

- **영세·과밀업종***, 업권별로는 **2금융권 중심**** 증가

* 도·소매, 숙박·음식업 대출 비중(%) : ('17.4Q) 37.6 → ('24.1Q) 42.0

** 은행/2금융권 비중(%), '19년→'24년) : ('19.4Q) 72.7/27.3 → ('24.1Q) 62.5/37.5

- 최근 **고금리 지속** 등으로 자영업자 **대출 연체율***이 **빠르게 상승**

* 자영업자 대출연체율(%): ('21.4/4)0.5 ('22.4/4)0.6 ('23.4/4)1.3 ('24.1/4)1.5

- 특히, **취약차주*** **연체율****은 전체 연체율보다 **크게 높은 수준**

* 다중채무자(3개 금융기관 이상)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(약 40만명, '24.1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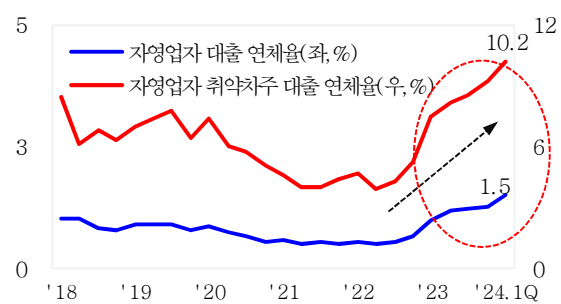
**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(%): ('22.4Q)5.3 ('23.4Q)9.2 ('24.1Q)10.2

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



* 출처 : 가계부채DB (한국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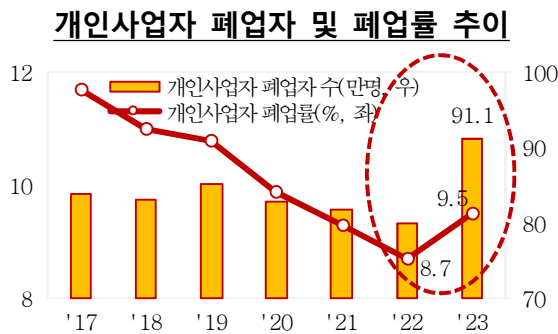
대출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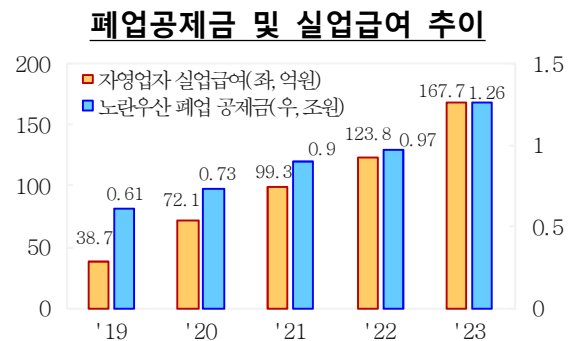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가계부채DB (한국은행)

□ [폐업] 폐업률이 상승 전환하고, 폐업공제금·실업급여 증가

-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'20~'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'23년 들어 상승 전환('23년 폐업자수 91만명)
-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



* 출처 : 국세통계 (국세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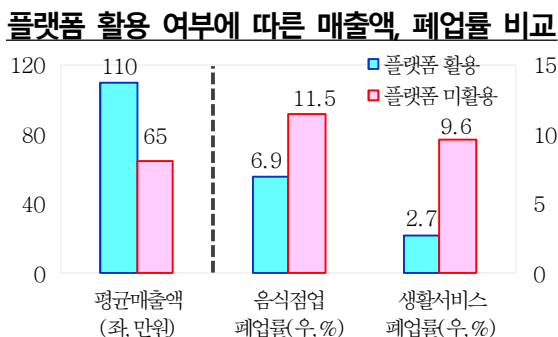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중기부·고용부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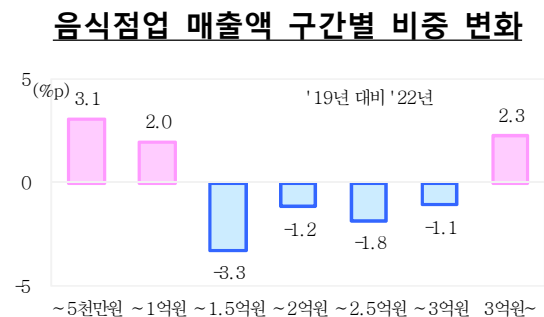
□ [환경변화] 스마트·디지털化, 온라인 쇼핑·배달 확대 등 환경변화 가속

- 최근 스마트·디지털化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
- 음식점업의 경우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등 경영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
- 하지만,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스마트·디지털化는 저조*한 상황

* '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(소진공) :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85%,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 70%이나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율은 29%



* 출처 : 신한카드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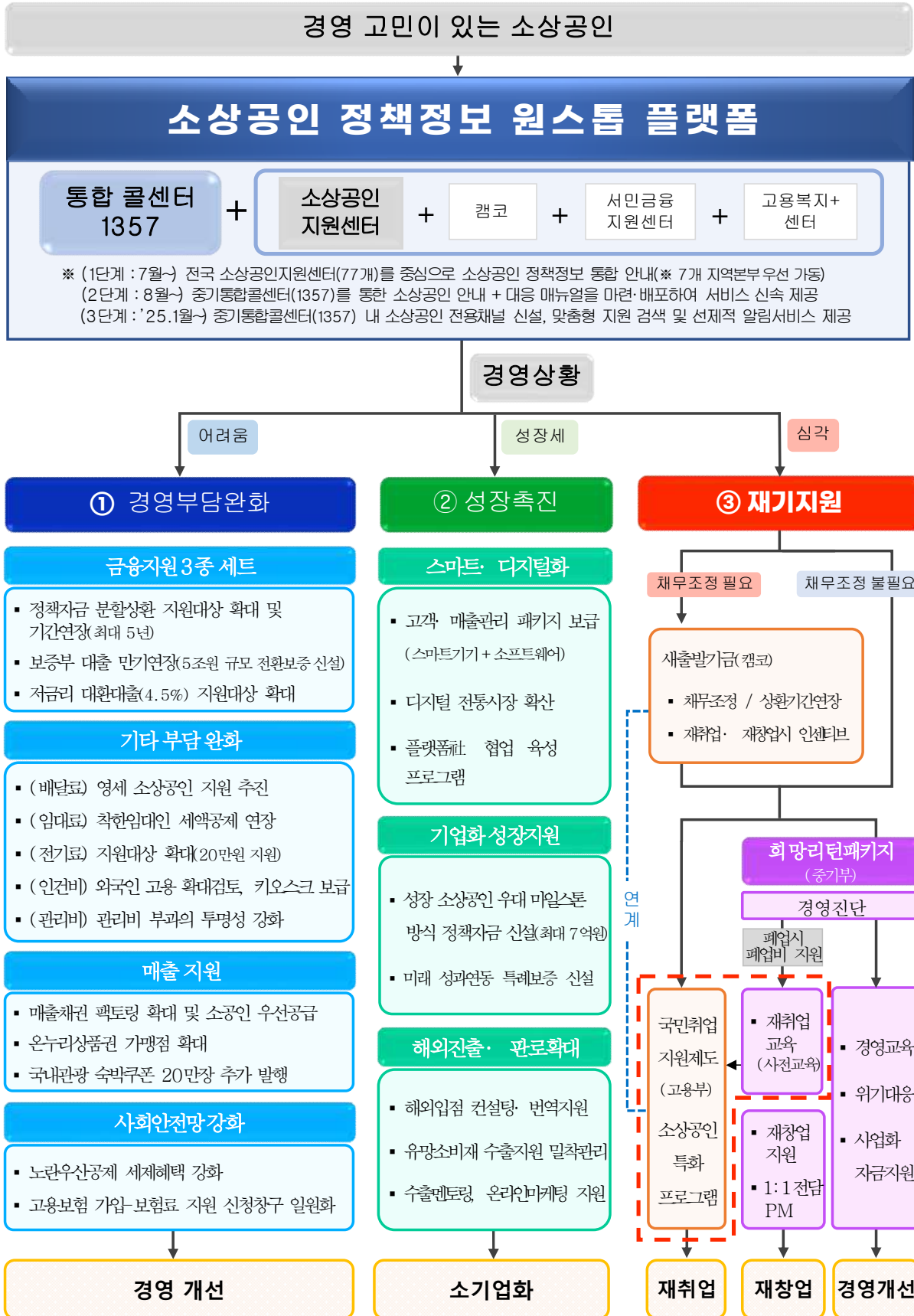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소상공인 실태조사 (중기부, 통계청)

II.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

- ◇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,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
 -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,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
 - 그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으로 창·폐업을 반복*하는 소위 '회전문 창업'으로 고통
 - * 창업 전 창업교육 수행 비율 26.7%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 : 20.6%(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)
 - 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,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
- ◇ ①취약계층 중심의 ②충분한 지원과 ③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추진
 - (경영부담 완화)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, 배달료,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*을 완화하고, 대출기반도 확충
 - * 비용증가 요인 응답(%): <원자재·재료비>20.9 <인건비>20.0 <에너지>18.2 <임차료>14.2 <대출상환>12.2 順 (한경협 자영업자 설문조사, '23년)
 - 특히,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 적극 추진
 - (성장촉진)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·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(scale-up)을 적극 지원
 - (재기지원)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'빛의 굴레'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
 - 준비된 취업·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 뒷받침

Ⅲ.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



1. 경영부담 완화

1 비용부담 완화

◇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주요 **비용부담 완화** 적극 추진

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("채무걱정 덜어드림" 3종 세트) 적극 추진

① **(정책자금 상환연장)**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¹⁾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+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²⁾도 개선('24.8월~) **중기부**

1) 지원대상: (現) 업력3년 이상, 대출잔액3천만원 이상 → (改) 업력·대출잔액 기준 폐지

2) 연장시 적용금리: (現) 정책자금 기준금리 +0.6%p → (改) 기존 이용금리 +0.2%p

② **(전환보증)**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(최대 5년)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('24.7월~) **중기부**

*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.2%p 인하

③ **(대환대출)** 은행·비은행권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*(소진공, 0.5조원) 요건 대폭 완화**('24.8월~) **중기부**

* 4.5% 고정금리, 5천만원 한도, 10년 분할상환

** (신용도) NCB 839점 → 919점 이하 (대출시점) '23.8.31 → 대책 발표(7.3일) 이전 (대출유형) 사업자대출 → 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 (1천만원 이내)

▪ 민간 금융기관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* 활성화를 위해 온·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 **금융위**

* 총 10.6조원 규모(잔여 9조원, 既집행 1.6조원), 차주당 1억원 한도, '22.9월~

**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+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

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

구분	①(소진공 정책자금)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	②(지역신보 보증) 전환보증 지원(신규)	③(민간금융) 대환대출 요건 완화																
지원 내용	경영애로*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* 예: 다중채무, 신용점수 하락 등	신규 보증으로의 전환 (5조원 규모)을 통해,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→ 상환기간 연장효과	중·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·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(7% 이상)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(4.5% 고정금리, 차주당 5천만원 한도)																
대상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현행</th> <th>개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상상환 중</td> <td>좌동</td> </tr> <tr> <td>업력 3년 ↑</td> <td>무관</td> </tr> <tr> <td>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↑</td> <td>대출잔액 기준폐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선	정상상환 중	좌동	업력 3년 ↑	무관	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↑	대출잔액 기준폐지	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中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(신규 프로그램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현행</th> <th>개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NCB 839점 이하</td> <td>NCB 919점 이하</td> </tr> <tr> <td>'23.8.31 이전 대출</td> <td>'24.7.3 이전 대출</td> </tr> <tr> <td>사업자 대출 한정</td> <td>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(1천만원 이내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선	NCB 839점 이하	NCB 919점 이하	'23.8.31 이전 대출	'24.7.3 이전 대출	사업자 대출 한정	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(1천만원 이내)
현행	개선																		
정상상환 중	좌동																		
업력 3년 ↑	무관																		
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↑	대출잔액 기준폐지																		
현행	개선																		
NCB 839점 이하	NCB 919점 이하																		
'23.8.31 이전 대출	'24.7.3 이전 대출																		
사업자 대출 한정	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(1천만원 이내)																		
상환 기간	최대 +5년 연장	최대 +5년 연장* * 연장시 상환방식: 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등	최대 10년 분할상환																

○ (금리·자금공급) 정책자금 금리 인하,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추진

-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용자 금리 $\Delta 1.0\%p$ 인하('24.下~) 농림부

* (금리, %) 現 2.5~3.0 → 改 1.5~2.0, (대상) 용자금액의 125%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

-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(한도 3천만원)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
신용도 기준을 상향*하고, 금년 중 2천억원 추가 공급(4~6천억원) 중기부

* (現) NCB 744점 ↓ 소상공인 → (改) NCB 839점 ↓ 소상공인

② 배달료·임대료·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

① (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) 플랫폼 사업자·이용사업자(입점업체 등)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**중기부+공정위 등**

- 배달*·숙박앱, 모바일상품권**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('24.下)

* 배달앱 사업자,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(공정위·농식품부·중기부)

** 모바일상품권 사업자, 가맹본부·점주단체,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협의체 운영
→ 모바일상품권 수수료(5~10%) 감면, 정산주기(최대 45일) 단축 등 논의

-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內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**기재부 등**

▶ 거버넌스 개편 방향: 민간·정부·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필요한 아젠다 설정 → 개별 분과에서 논의 → 이행상황 점검·평가 및 결과 공개

-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,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('25~) **중기부**

② (임대료)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,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

-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(인하액의 최대 70% 세액공제) 일몰 연장('24 → '25년말) 추진 **기재부**

- 국유재산 사용료*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('24 → '25년말) **기재부** 하고,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** **행안부** 도 지속 추진


* (사용료) 재산가액 3 → 1%로 감면, (연체이자율) 10% → 5%

**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^{최저}1%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(공유재산법 제14조)

-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* 적극 활용·지원 기재부

*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,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,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음(계약사무규칙, 기재부)

③ (전기료)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(20만원) 대상 확대(현연매출 3천만원 이하→^改6천만원 이하, +^{최대}50만명, '24.7월~) 중기부

 ■ **소상공인연합회**: 현재 전기료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→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

④ (인건비)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,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* 중기부


* '24년 : (한도) 최대 500/1,000만원 (보조율) 품목별 50~70% (공급규모) 약 6,000개

-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-9 비자 시범사업¹⁾('24.4월~) 평가를 토대로 지역·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²⁾ 검토('24.下) 고용부

1) 현재 한식업 중 일정업력(5~7년)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
2) 구인난 현황,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

⑤ (관리비 등)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*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,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 법무부+국토부

*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('24.5.8 개정)

 ■ **소상공인연합회**: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'꼼수'가 빈번히 발생


- 소상공인의 권리금·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* 적극 활용 법무부+국토부

* (신청자) 임대인/임차인 (구성) 판사, 교수, 변호사 또는 상가임대차 전문가 (기간) 60일내 종결 (효력) 민사상 합의,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

3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·규제 합리화

- **(프랜차이즈)**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,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위
 -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(품목 확대, 가격 인상 등)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
 -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,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상향 조정*
- *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: (현행) 3점 → (개선) 5점
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: (현행) 2점 → (개선) 3점

- **(신용평가체계)**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지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금융위+국세청
 -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(예: 세금신고정보) 제공 확대* 추진
- *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(근로소득세 15개 항목, 종합소득세 18개 항목) 제공 중

 ■ **소상공인연합회:**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지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 → 매출액 등 사업실태를 반영한 자금조달에 애로

- **(비축물자)**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은 시장·슈퍼까지, 수산물도 슈퍼까지 공급 해수부+농림부

구분	현행	개선
비축농산물	▪ 공매·경매 통해 대량 유통	시장상인, 동네슈퍼 판매
비축수산물	▪ 전통·도매시장, 대형마트 등 유통	동네슈퍼 판매

- **(도로점용료)** 일반음식점,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% 감면 연장 추진(~'24→~'26년) 국토부

- **(법률지원)**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***중기부**
 - * (現) 중위소득 125%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
 - (改) 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
- **(수수료 감면근거 마련)** 법령상 **확일적**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 의무*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('24.8월)**법제처**
 - * 자격장 설치 허가, 전기·생활용품 안전인증,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 수수료
- **(간이과세 매출기준)**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(8천만원→1억 4백만원, '24.7.1 시행)

4 노란우산공제,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

- **(노란우산공제)**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(연 최대 5→6백만원)**기재부**
 - * 사업종료,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, 월 5~100만원 납입
 -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('25)**중기부**
 - * 現: (무이자 대출) 질병·상해, 재해, 파산 등 / (납부유예) 회생, 파산, 입원 등
- **(고용보험)**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고용부)-보험료 지원(중기부)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**중기부+고용부**

▶ (現)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
 (改)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

2

매출기반 구축

◇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 + 국내 소비·관광 촉진

1 매출채권 팩토링 소공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매출 신속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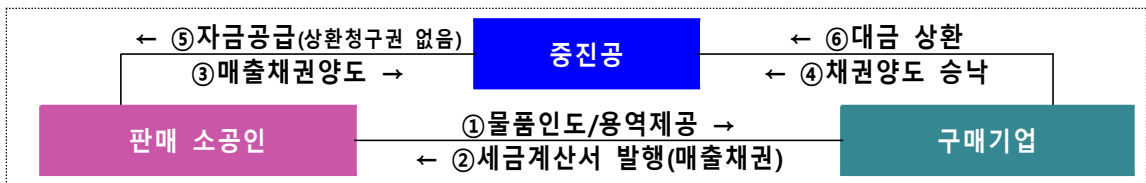
- (매출채권 팩토링) 매출채권 팩토링*(중진공, '24년 375억원) 규모를 확대('24.下)하고, 소공인에 우선 공급 중기부

* 중진공이 소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

- 소공인 팩토링 지원 확대*를 위해 소공인에 대해서는 판매 기업 제한요건 일부 완화 및 평가기준 우대 검토

* 지원 비중: '24.上 37% → '24.下 ^{목표} 45%

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구조



- 아프니까 사장이다 :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려, 원자재비 구매,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단기 급전을 사용하는 등 금융부담 발생

- (매출채권 조기정산 유도)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 기한(60일)보다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협약평가 기준 개정 등 조기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정위

*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상 직매입대금 지급 기한인 '60일'의 단축 여부에 대한 검토 추진도 병행

2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

- (온누리상품권*)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 중기부

* (사용처) 전통시장, 골목형상점가 (혜택) 할인판매(지류 5%,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10%)

-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(40→28종, '24.9월~) +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용처 확대('23년 182→'27년 300개) 중기부

▶ 가맹제한 해제: 스포츠학원, 노래방, 병원(한방·치과), 동물병원, 법무회계·세무 서비스 등
 ▶ 골목형상점가 지정: ^(기준) 2,000m²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등 밀집 기준 중기부 협의→ ^(개선)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밀집기준 지정('24.1월~)

- 카드형(신용카드)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(0.5~1.5%→0.25~1.2%) 금융위,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지속 농림부+해수부
-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 중기부

③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

- (숙박 쿠폰)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장 추가 발행(45→65만장) 문체부
- (상권 활성화)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'도시재생씨앗음자' 대상에 상가복합주택 허용('25년)*하고, 업종 제한 완화('24.下)** 국토부
 - * 예) 총 사업비 70% 한도, 일정비율 이하 주거 공간 조성 허용
 - ** 현재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, 스크린 야구장 등 허용,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
- (K-미식벨트) '한국의 장(醬)'을 주제로 1호 K-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등 K-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*('24.下~) 농림부
 - * 발효문화(김치, 전통주 등), 전통한식(종가 등), 제철밥상(사찰음식, 보양식 등), 유행한식(K-베이커리 등) 등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
- (글로벌상권)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(로컬브랜드 창출) 및 시장콘텐츠 창출(특성화시장 육성) → 글로벌 상권 기반 마련 중기부

2. 성장촉진 지원

1 스마트·디지털化 및 Scale-up 지원

◇ **스마트·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소기업으로 도약(Scale-up)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**

① 업종별·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·디지털化

- **(맞춤형 지원)**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* 추진('25.上~) 중기부
 - *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제공, 소상공인 대상 SaaS 도입,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
- **(디지털전통시장)** 경동시장(서울), 중동사랑시장(부천)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'디지털 전통시장' 지속 구축('24년 57개) 중기부
 - 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('25~)
 - * 1단계 첫걸음(디지털 기초역량·상인조직화) → 2단계 고도화(온라인 입점·근거리 물류) → 3단계 확산(고유상품 개발·전국물류) → 4단계 글로벌(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)
- **(플랫폼社 연계)**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(10개)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, 1:1로 밀착지원('25.上) 중기부
 - * **TOPS 프로그램** : Top platform'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

- ▶ (분야) 오픈마켓, 위치기반, 라이브커머스, 식품, 패션, 생활·리빙, 뷰티 등 10대 분야
 - ▶ (발굴) 고유의 브랜드·스토리·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 발굴
 - ▶ (진입·안착)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소상공인 현장어로 1:1 컨설팅 + 플랫폼 공동 홍보
 - ▶ (성장·도약) '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' 마련, 해외 진출 연계 지원
- **(소상공인 실태 DB 구축)** 소상공인 업종·특성,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·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 구축 중기부
 -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간소화한 별도의 속보 통계를 생산하여 소상공인 경영여건·경쟁력 수준 등 동향 적기 파악·대응

② 소상공인 → 소기업으로의 Scale-up 지원

- **(정책자금)**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-중진공 연계 “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(최대 7억원)” 신설 중기부
 -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* 대상 전용자금 ^{최대}2억원 공급(소진공),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(^{최대}5억원, 3회 분할) 제공(중진공)
- * 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(업종별 10~120억원)의 30% 이상이면서 ②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(업종별 5~10명)보다 1~2명 적은 기업

마일스톤 프로그램 지원 체계



- **(특례보증)**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중기부
 -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성과목표 약정* 체결 및 1차 보증 →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~3차 추가 보증(지신보)
 - * 1차 지원 후 소기업 진입 및 매출 유지(또는 증가) 시, 한도사정 우대(평가액의 150~200%)에 따라 2~3차 추가 지원의 최소치 보장(추가 보증료 0.2~0.3%p 감면)
- **(사업화 자금)** 투자자(VC 등)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하는 경우, 최대 3배(2억원 한도)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중기부
- **(유예 선택권)**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, 획일적 유예제도*로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‘유예 선택권’ 부여 중기부
 - * 소상공인이 소기업 요건 달성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, 일률적으로 3년 간 소상공인으로 간주
 - **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사유 추가
 -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 시, 소기업 사업 우대혜택 등 지원
- **(향토기업)** 향토기업* 요건을 완화(근로자 20명 → 10명)해 성장 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, 자금·판로 확대 등 지원 중기부
 - * 사업장 중 하나를 특정 시·도에 20년 이상 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

◇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밀착지원

- **(해외 쇼핑몰)**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(번역 등) 지원 대상 확대*^[중기부]
 - *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,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, 해외마켓 타겟업체 등('24년 1,100개)
- 국내 대형 유통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 개최
- **(특화 품목 수출)**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^[중기부]
 -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¹⁾를 선정하여,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²⁾하고, 수출계약 체결 쏠과정 밀착 지원 ('24.9~)
 - 1) (예시) 식품(밀키트), 화장품, 의류, 패션잡화, 문구 및 완구 등
 - 2)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전시관 운영 등
 -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 등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선정('25.)
- **(첫 수출 지원)** 수출교육·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^[중기부+산업부]

- ▶ (온라인 수출교육) 글로벌 쇼핑몰 입점·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(SNS마케팅 등) 등 교육
 - ▶ (수출멘토링) 구매자 발굴·교신, 선적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,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

※ 금년 중 100회 내외 교육, 800개 소상공인의 첫 수출 지원
- **(동행축제)** 판로·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^[중기부]
 - '동행축제'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·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하여, '24~'27년 매출 20조원 달성 추진
 -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함께 현지 기획전(팝업 스토어), 수출 상담회 개최 등 협업체계 구축, 진출국가 확대('24. 베트남)

3. 재기지원

1 채무조정

◇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

① 새출발기금 확대 (30→40조원+ α) + 취업·재창업 연계 지원

- (범위 확대)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¹⁾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²⁾도 연장^[금융위]

1)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: (現)'20.4월~'23.11월 → (改)'20.4월~'24.6월

2) 신청기간 연장: (現)~'25.10월 → (改)~'26.12월

- (취업·재창업 연계)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
① 교육프로그램, ② 감면을 우대, ③ 신용회복 연계 지원^[금융위+중기부+고용부]

구 분	지원내용
① 교육연계	▶ 취업 교육(국민취업제도 내 프로그램, 고용부)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(희망리턴패키지 내, 중기부) 안내·연계
② 감면율우대	▶ 교육 이수시, 원금감면을 10%p 상향 *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 : (現)최대 80% → (改)최대 90%
③ 신용회복	▶ 교육 이수 후 취업·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(현재 1년간 유지)

②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

- (일시상환 유예) 소상공인 폐업 시,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(고시)^[중기부]

- (브릿지보증)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시,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*(24.下)^[중기부]

* (現)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→ (改)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

- (DSR 적용 제외)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, DSR 적용 제외 명확화^[금융위]

*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시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,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안내

2

취업·재창업 지원

◇ 소상공인의 취업·재창업 지원을 위한 「새출발 희망 프로젝트」 추진



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+ 재취업자고용주에 인센티브

- (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)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·정책연계('25.1월~) 중기부+고용부
 - 기존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)의 취업지원 프로그램(약 30시간 교육)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·개편* 중기부
 - *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60만원으로 확대 지원(現 40→改 60만원, +20만원)
 - 이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(고용부) 내 폐업(예정)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(최대 6개월) 고용부
 - 폐업초기 단계(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시)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(중기부→고용부)하여 신속 지원 서비스 제공 중기부
 - * (現) 중기부-고용부간 온라인 연계 부재(희망리턴패키지 참여 확인서 발급·증빙)
 - (改) 당사자 동시 구직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(워크플러스)으로 연계

- **(재취업 유인 확대)** 폐업 소상공인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주의 ②폐업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('25.1월~) **중기부+고용부**
-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^{최대}6개월간 약 月 50~110만원 **훈련참여수당*** 및 **취업성공수당**(최대 190만원) 지급 **중기부**
- *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, 고용부+중기부 지급수당 합산 기준
- ②**고용촉진장려금** 지원대상 **취업지원 프로그램**을 이수한 **폐업 소상공인(실업자)**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**지원요건 충족시 고용촉진장려금** 지급(1명당 1년간 月 30~60만원) **고용부**

2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

- **(재창업 프로그램)**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1: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 **중기부**
- 업종별 재창업 교육, 업종전환¹⁾ 및 성장업종²⁾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창업 사업화(최대 2천만원(1회), ^{최대}7개월) 지원 확대 추진
- 1) 기존 사업 실패원인 분석·상담 → 상권분석 등 중점 컨설팅
- 2) 헬스·뷰티케어, 친환경, 레저·문화, 애견·시니어산업 등

3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지원

- **(점포철거비 확대)** 폐업 점포철거·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여 **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**(^現최대 250→^改최대 400만원, '25.~) **중기부**



- **아프니까 사장이다(카페):** 점포철거·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 수준 소요, 현재 지원 기준인 250만원으로는 부족→ 지원금액 확대 필요

- **(폐업지원)**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①**사업정리 컨설팅**, ②**점포철거비 지원**, ③**법률자문**, ④**채무조정** 등 **원스톱 패키지 지원** **중기부**

- ▶ ① (사업정리컨설팅) 폐업시 절세 및 신고기한, 집기·시설 처분 방법 등 관련(12,000명)
- ▶ ② (점포철거비) 점포철거·원상복구비 지원(3.3m²당 13만원, 22,000명)
- ▶ ③ (법률자문 등) 임대차, 가맹,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 +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

IV. 운영체계 :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

◇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, 금융, 취·창업,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중기부+고용부+금융위

1] (1단계: 7월)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77개)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*

* 예: 서민금융진흥원, 캠프, 고용복지+센터,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및 금융 3종 세트, 새출발기금, 희망리턴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, 전기료 지원 등 안내

※ “지역본부(7개) +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센터”에서 안내체계 우선 가동

↳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부에서 추후 안내 예정

○ 관계기관 홈페이지 (소상공인24, 새출발기금, 서민금융 있다, 고용24 등)에 소상공인 지원분야별 정책·지원정보를 안내(필요시, 팝업창 활용)

2] (2단계: 8월) 중기통합콜센터⁽¹³⁵⁷⁾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

○ 관계기관간 연락망을 구축·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·배포하여 서비스 신속제공 지원

3] (3단계 : '25.1월~)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

○ 중기통합콜센터 1357의 인력·전문성 보강을 통해, 소상공인 전용 채널*을 신설하고, 정책안내 및 상담 서비스 확충**

* (現) 1번 정책자금/2번 R&D/3번 창업/4번 확인서 → (改) 1번 소상공인 추가

** 1357 콜센터 소상공인 전담 상담팀 구성, 기존 상담이력 기반 FAQ 체계화 등

○ ‘소상공인24’의 지원사업 정보제공을 지속 확대*하고, 조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

* (現) 중기부 중심 → (改) 금융위·고용부 등 중앙부처 사업 등으로 확대

V. 향후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추진시기	부처·기관
1. 비용부담 완화		
▶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요건완화 및 가산금리 개선	'24.8~	중기부
▶ 5조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	'24.7~	중기부
▶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	'24.8~	중기부
▶ 대환대출 프로그램 온·오프라인 홍보	'24.7~	금융위
▶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용자 금리 인하	'24.7~	농식품부
▶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·추가공급	'24.7~	중기부
▶ 배달·숙박업, 모바일상품권 등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	'24.下~	공정위, 농식품중기부
▶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	'25.~	중기부
▶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(~'25년말) 추진	'24.下	기재부
▶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 연장(~'25년말)	'24.下	기재부
▶ 공공기관 자산 임대료 계약 특례 활용·지원	'24.下~	기재부
▶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	'24.7~	중기부
▶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	'25.~	중기부
▶ E-9 비자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 검토	'24.下	고용부
▶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유도, 개선 검토	계속	법무·국토부
▶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	계속	법무·국토부
▶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	'24.下	공정위
▶ 상생협력 등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상향	'24.下	공정위
▶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	'24.下~	금융위·국세청
▶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(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 일부)	계속	국세청
▶ 비축물자 공급 대상 확대	'24.下	해수·농림부
▶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('24→'26년) 추진	'24.下	국토부
▶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	'25.~	중기부
▶ 소상공인 금전납부 의무 완화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	'24.8	법제처
▶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	'24.7	기재부
▶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	'25.~	기재부
▶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, 납부유예 인정사유 확대	'25.~	중기부
▶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	'24.下~	고용·중기부
▶ 매출채권 팩토링 제한요건 완화 지원 확대	'24.下~	중기부
▶ 매출채권 조기정상 유도 방안 검토	'24.下~	공정위

▶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	'24.9	중기부
▶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 확대	'24.~	중기부
▶ 카드형(신용카드)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	'24.下	금융위
▶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	계속	농림·해수부
▶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	'24.下~	중기부
▶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추가 발행	'24.下	문체부
▶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	'24.下	국토부
▶ K-미식벨트 TOP30 조성	'24.下~	농림부

2. 성장촉진 지원

▶ 민간기업 보유 경영정보 DB 활용 맞춤형 지원	'25.~	중기부
▶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	계속	중기부
▶ TOPS 프로그램 운영	'25.~	중기부
▶ 소진공-중진공 연계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·운영	'25.~	중기부
▶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	'25.~	중기부
▶ 소기업 유예 선택권 부여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)	'24.下	중기부
▶ 향토기업 요건 완화	'25.~	중기부
▶ 해외 쇼핑물 입점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확대 지원	'25.~	중기부
▶ 소상공인 유망 특화 품목 수출 확대	'24.下	중기부
▶ 수출교육·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	계속	중기부·산업부
▶ 동행축제를 판로·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	계속	중기부

3. 재기지원

▶ 새출발기금 확대 + 취업·재창업 연계 지원	'24.9~	금융위
▶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	'24.9	중기부
▶ 브릿지보증 전국 확대	'24.下	중기부
▶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	'25.~	중기부·고용부
▶ 폐업 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	'25.~	중기부·고용부
▶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	'25.~	중기부

운영체계 :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

▶ (1단계) 소상공인지원센터(77개) 중심 통합안내	'24.7~	중기부·고용부 ·금융위
▶ (2단계) 중기통합콜센터 ¹³⁵⁷ 소상공인 안내 가동	'24.8~	
▶ (3단계)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	'25.1~	

참 고

소상공인,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개념

□ 주요개념

- (소상공인) 소기업* 중 상시근로자 5(10)인** 미만인 기업(소상공인법)

*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~120억원(도·소매 50억원 이하, 숙박·음식 10억원 등)

**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

- (개인사업자)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·업체(부가가치세법)

- (자영업자)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,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(인구통계상 용어)

*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+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(1인)

<소상공인,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개념도>

법 인	개 인	무등록사업자
소상공인 : ('21) 734만개(기업) * 중기부, 「중소기업 기본통계」 (간판없는 소상공인, 복수사업자 포함)		
법인 (72만개)	개인 (662만개)	
개인사업자 : ('22) 843만명 *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(사업자등록기준, 복수사업자 포함)		
일반 (505만명)	간이 (208만명)	면세 (129만명)
자영업자 : ('24.4) 562만명(인구) *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, 노점상 등 포함)		